

# 韓 '패스트트랙 폭로' 변수 될까... 나·원·윤, 막판 당심공략

(가나다순)

## 국민의힘 전당대회 D-DAY

한동훈, 논란에 몸 낮추는 모습  
나경원, 부산·대구 찾아 지지 호소  
원희룡, 울산·경남서 '원팀' 강조  
윤상현, 소통관서 국회 현안 집중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무난히 당 대표에 당선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 모바일투표는 지난 19~20일에 실시했고 총 투표율 40.47%를 기록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선거인단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표 결과를 80%, 여론조사 결과를 20% 반영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엔 1위 득표자와



나경원  
당 대표 후보



원희룡  
당 대표 후보



윤상현  
당 대표 후보



한동훈  
당 대표 후보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한동훈 후보는 선거 운동 초반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터져도 지지도에 타격을 입지 않으며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며 당 대표 직행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으나, 나경원 당 대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으로 당 안팎의 우려를 사자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 방송토론

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경쟁 후보들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취해 선거운동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지난 21일 저녁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논란이 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여당 측 변호인단을 만나 격려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힘껏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는 22일 경기도 포천과 이천을 찾아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의원과 송석준 의원을 만나 수도권 당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나경원 후보는 선거 막판 부산과 대구를 찾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가 많이 깨

지신 것 같다"며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제가 했다고 언론에다가 말씀하신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당 대표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겠다는 생각과 선거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심해졌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를 통합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도 울산과 경남을 찾아 당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원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가능성에 대해 "특검 문제, 동지 의식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차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진지한 선택을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 'K-A 가디언즈' 시사회 참석을 취소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사기 기획 탄핵'을 하고 있다며 국회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노경필 인사청문회, '김건희 리스크' 두고 與野 공방

(대법관 후보자)

野, 김 여사 주가조작 공범여부 질문에  
노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  
與 "법관으로서 자질·능력 검증해야"

여야가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과 비공개 검찰 수사로 공방을 벌였다. 노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지난 2009년 판례(2008도6551) 사례를 들며 노 후보에게 "주가조작을 하는데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 계좌와 자금을 교부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



노경필

동들을 하면 전주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중에서 289번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온다"며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중에 108건 중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뤄진다. 그러면 그 전주는 공범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내역"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

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선 개별적 사건보다 후보자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게 시작하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 달성에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기소조차 안 된 사건에 대해 후보자께서 판단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평생에 걸친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자

리에서까지 정치적 사안을 후보자님께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기소 시점은 받은 시점"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범죄라고 한다면 이미 기소 종료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도 모르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해명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는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조국 현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법무부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을 최소화한다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도현 기자 yunbgh0611@

# 여야 지지도 격차, 8.9%p 벌어져

10주 만에 오차범위 밖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8.9%포인트로 10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포인트) 국민의힘 42.1%, 민주당 33.2%, 조국혁신당 9.3%, 개혁당 5.0%,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0.8%, 기타정당 1.3%, 무당층 7.0%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4.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지지도가 1.8%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같은 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26.3%의 지지도를 기록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9.3%포인트가 올랐다. 인천·경기에서도 38.8%를 기록해 5.6%포인트가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4.9%의 지지도로 4.7%포인트가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11.7%포인트가 올라 42.7%를 기록했다. 30대에선 4.5%포인트가 올라 37.6%를 기록했다. 20대에서도 2.2%

가 올라 28.6%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5.3%포인트가 하락한 33.4%, 부산·울산·경남에서 5.0%포인트가 감소한 27.0%, 인천·경기에서 1.6%포인트 하락한 3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5.7%포인트가 하락한 32.9%, 30대에서 4.9%포인트 하락한 33.4%, 40대에서 2.5%포인트 하락한 45.0%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15일에서 19일까지 2506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3.0%,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국정평가는 34.5%포인트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박태홍 기자

# 강민수 "상속세 개편, 논의할 시기 됐다"

(신임 국세청장)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서 입장 밝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에게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4년 전 세율과 과세 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24년 전 같으면 10억원에 40% 상속세율이었

다. (10억원이면) 당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으로 4채를 산다"면서 "2024년 현재 (아파트) 한채가 13억원이 되면서 한 채(값)에 대해 40%의 세금을 내는 것은 폭탄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0%, 5억원 이하 구간 20%, 10억원 이하 구간 30%, 30억원 이하 구간 40%, 50억원 초과 구간 50%가 적용된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이 의원이 상속세 물가연동제나 과표 표준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인데, 집행 기관 입장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논의할 시기는 분명히 됐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